

여야, 국정원 개혁법안 30일 처리 '불안 불안'

정보관 정부기관 출입제한 범위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

민주 초선 26명 "특검·국정원 개혁 피하면 행동 돌입"

여야 국정원 개혁법안을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불과 4일 전인 26일에도 국회 안팎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물밑 협상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와 이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 정보위원의 비밀엄폐권과 비밀유지 의무 강화, 기밀누설 시 처벌 강화 등에는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 수준을 높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 "여야 지도부가 문건으로 합의해 공표한 내용조차 법안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태와 다름없다"며 "그럴 때 연립국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새누리당의 몫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면 과국의 방아쇠를 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며 "정권안보를 위해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의회주의 파괴정권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26명도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자신만의 원칙을 고집하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은 수백년 전 '집이 곧 국가'라는 왕정시대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과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마지막 해결책을 저버린 채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는 필시 국민적 고통으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검과 국정원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바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란히 출연, 정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정보관(10)의 정부기관 등 출입제한 범위와 관련, "국회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일부 민간부문에 대해 상시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돼있다"면서 "(모든) 정부기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인정하는 이상 정부기관 출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처럼 상시출입을 하거나 파견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필요하다면 출입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 불발 여야, 검찰개혁 연내 입법화 불투명

국회의원도 감찰대상 포함될듯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룰지 못해 검찰개혁의 연내 입법화가 어려워졌다. 특히 여야 간에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의 형태도 기존 야당의 요구 수준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낮은 수위여서 공약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제1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소집,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특검 실시 요건 등 일부 쟁점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의결 요건과 관련, '3분의 1'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 '2분의 1'로 수정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은 국회 의결을 거처더라도 법무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과 관련, 예초에는 제외하려 했던 국회의원을 여론의 역풍을 감안, 포함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국회의원 포함'을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을 감찰 대상에 넣을 경우 대법원장 등 판사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법사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조율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내년 2월 국회 처리'로 맞서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주의·민생 위한 철야농성'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동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인상 합의점 못찾아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정부는 예초 80kg당 현행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 보다 5603원 인상을 17만9686원을, 민주당은 19만6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농해수위는 26일 예정된 6인협의체 가동 없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과 소관부처

들의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쌀 목표가격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김영록 의원은 "농해수위의 가장 큰 현안인 쌀 목표가격을 뒷받침할 법안도 마련 못하고 어떻게 다른 법을 논의할 수 있느냐"며 "실질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기운 의원은 "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며 "다른 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지경기자jkipark@

'택시 과잉공급 차단' 택시발전법 국토위 통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승차거부 강력 처벌...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까지 보장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하지만, 쟁점에 따라 택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노조 모두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

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택시회사가 유료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제조, 충전소 건설 등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 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250%, 대구·대전 280% 등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3중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로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체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김관영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도 이노근 의원 개정안과 통합해 의결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은 26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만 발간하도록 돼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발간·배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법률 개정에는 새누리당 김부성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25명 외에도 여야 의원 20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010-3690-7790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대로변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
- 백운동 로타리 대로변 주월동 상업지역 551㎡(167)병원 등 빌딩적합 대출 12억 매도 2억5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임야 71430평 평당 3천원 2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수익 9억6천
- 담양과 순창간 4차선 국도점 관리지역 810평 가드,전원주택 등 적합 평당 30만원 조정가능함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 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동물사육·아직장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6000만원
- 모텔, 전복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몽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할적합 건물 합평권 월이면 당 2657㎡(804)건물 2층 57평 은행 2억 기도원용 산 주택과 교환도 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복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원 월900만원 매도9억6천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임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판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